
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2>	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	
책임자	신진창 과장(2156-9850)	담당자 홍상준 사무관(2156-9860)
배포일	'15.12.16	배포부서 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2대

제 목 :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1. 추진 배경

- 「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」(‘15.6.15.) 및 「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」(‘15.9.10.)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

* 한편,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자본건전성 규율 강화(대형저축은행 BIS비율 기준 7→8% 등)도 동시에 추진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노력도 병행

- 한편, 대출 실행 시 예·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(일명 ‘쥘기’)을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

2. 주요 내용

①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축소(영 제20조)

- (현행)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결산 등 외부감사 시 저축은행 임원이 징계(직무정지, 해임권고)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(회계법인 등)을 특정하여 지정*

* 해당요건 포함 총 9개 사유를 열거 → ‘14FY 기준 79개사 중 44개사에 지정(55.6%)

⇒ 상호저축은행의 회계·감사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

- (개정)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는 ‘해임권고’를 받은 경우로 한정*해 상호저축은행의 부담 감경

* 여타 8개 지정 사유(BIS비율,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 건전성 요건 포함)는 현행 유지

② 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(영 제9조)

- (현행)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 자본액의 20%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
- (개정)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,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

* (현행) Min[6억원, 자기자본의 20%] → (개정) Min[8억원, 자기자본의 20%]

③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(영 제10조)

- (현행) 자산 3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~5명 규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‘재적위원 2/3이상 찬성’으로 여신 실행
- ⇒ 위원 1명의 불참만으로도 의사결정이 제약되는 측면

* (예) 재적위원 5인인 경우 → 위원 1명 불참 시 만장일치 필요, 2명 불참 시 의결 불가

- (개정)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‘재적위원 2/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’으로 합리화

④ 금융상품 강요행위(쥘기) 규제 신설(영 제8조의2)

- (현행) 여신 거래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·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(일명 ‘쥘기’)에 대한 규제 미비

* 은행업권은 ‘10.5월, 보험업권은 ‘10.7월 법령 상 기도입

- (개정) 불공정 거래행위인 금융상품 강요(일명 ‘쥘기’)를 구체화하여 금지함으로써 위반 시 감독·행정상 제재 근거 마련

3. 향후 일정

- 입법예고, 규제·법제 심사 등을 거쳐 ‘16.3.31일 시행 계획

※ 시행령 개정사항과 연계된 하위 감독규정도 관련 절차를 거쳐 ‘16.3.31일 동시 시행 추진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